원인·발포 책임자·美 개입 여부 '세기의 과제'로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정부 협조 없는 민간기관 규명작업 한계

美보관 비밀 문서 올 해제 사전 준비 필요

② 진실규명과 보상

1980년 5·18 민중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유혈 진압된 지 오는 5월 18일로 30년을 맞는다. 광주 문제는 지난 30여 년 간 민간차원·학술연구·정부기관에 의해 보상 등 명예회복이 상당부분 이뤄졌다. 하지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한 획을 그은 5·18의 진실 규명은 일정 부분 역사의 베일에 가려 있다.

이 같은 진실 규명작업 자체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5·18은 발포 명령권자가 누구인지 등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당시 피해자와 가족, 광주시민들에게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5월의 참극은 1988년 5공 청문회에서 '설'(說)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민이 5·18을 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후 명예회복과 피해자 보상·진실 규명 등 '광주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학술 연구와 민간·정부에 의해 본격 시작됐다.

5·18 광주민중항쟁자료집(전남사회문제연구소·1988년) 발간과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조직(1988년), 한국 현대사료연구소 주최의 9주년 기념 학술대회(5·18 민중항쟁과 한국 민족민주운동·1989년), 사법기관·국방부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꾸준한 진실 규명 작업은 5·18이 신군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점과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년)·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0년) 제정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구술 채증에 의존하는 민간기관의 조사와 학술 연구에는 한계가 따랐다. 살아있는 권력의 힘은 제대로 된 진실 규명작업을 철저히 차단했다. 5·18이 과잉진압에 의해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과격시위 때문인지와 집단 발포 명령은 누가 했으며, 미국의 책임은 없는 지, 배상이 아닌 보상이 된 점 등 진실 규명과 보상에 대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정부에 의해 규명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남대 사회학과 최정기 교수는 "관련 주체에 따라 5·18 진실 규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겠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바라 본다면 90~95% 가량 진실 규명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다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꾸준한 규명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올해 30주년과 맞물려 미국이 소장중인 문서의 비밀해제 시한(30년)이 곧 다가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 "당시 미 국무성이나 주한 미군에서 파악했던 자료와 한국과 미국 간 오간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5·18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규명 활동이 정부에 의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만큼, 이는 5·18 기념재단 등 5월 관련단체가 적극 나서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 소위원회가 주남마을에서 발굴된 암매장 사체의 길이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지난 1989년 1월18일 국회 광주특위 현장검증 소위원회가 광주시 동구 주남마을 암매장 시신 발굴 현장을 답사하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항쟁의 주역 정동년

"5·18, 가야할 길 아직 멀어 30돌, 국민통합 발판으로"

"5월 항쟁은 4·19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과 시민이 한 몸이 돼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이는 곧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직접적인 계기가 됐지만 민주화의 긴 여정에서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고 봅니다."

1980년 5·18항쟁 당시 내란수괴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정동년(66)씨는 오월의 뜨거운 민주화 정신이 1987년 6·10 항쟁을 거쳐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이어져 왔다고 확신했다.

당시 신군부에 연행된 정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투쟁지원자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신군부의 시나리오에 의해 내란수괴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서울의 봄' 기간인, 1980년 4월 전남대 복학생 대표로 강의 초청을 위해 김 전 대통령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방명록에 이름을 남긴 것이 화근이었다.

2년여 뒤 형 집행정지로 석방됐다. 1984년 가을 전남대 졸업 후, 5·18 기념재단 이사와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광주 남구청장 등을 거쳐 올해 '5·18 3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그는 현재의 정치상황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회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는데,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같은 정부의 주요 사업은 가진 자들을 위한 것뿐이다. 또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역차별'도 심해졌다…. 한(恨)을 풀어낼 창구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번 30주년 기념행사를 다시 살아난 전라도 사람들의 한을 담아 풀어내고, 통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게 정 위원장의 생각이다.

"우선 5월 관련단체 간 갈등을 풀고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 광주는 물론 전국화·세계화로 향하는 행사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라도의 한을 풀어내는 장으로 만들 생각이다."

옛 전남도청 별관 철거문제로 대립각을 세운 5월 관련단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시각과 관련, 정 위원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이 갈라지듯 5월 관련단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최근 통합단체를 만들자는 데 뜻을 한 데 모은 것을 보면 5월 관련단체의 미래는 부정적이지 않다."

명예회복·보상·진실규명·기념사업 등 아직도 끝나지 않은 광주 문제와 관련, 정씨는 먼발치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지켜보겠다고 했다. "5월 민중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더 이상의 진실규명은 무의미하다. 보상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 다만 5월 민중항쟁을 제대로 알리는 기념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이는 5월 관련단체가 나아갈 방향이기도 하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